

1

안전문제에 대한 세계 동향과 서울시의 도시안전 발전방향

신상영 연구위원 syshin@si.re.kr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안전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기상이변 발생, 고도 도시화와 노후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해취약성 증가, 반복·심화되는 재난 증가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공간은 인구와 시설의 고밀화와 노후화, 각종 도시시설과 활동들의 높은 상호의존성,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비탈면, 지하공간 개발 등으로 인하여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1. 개요

안전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안전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기상이변 발생, 고도 도시화와 노후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해취약성 증가, 반복·심화되는 재난 증가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공간은 인구와 시설의 고밀화와 노후화, 각종 도시시설과 활동들의 높은 상호의존성,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비탈면, 지하공간 개발 등으로 인하여 연쇄적이고 복합적인 인적·물적 피해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도시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 동향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도시안전에 대한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세계의 대도시들은 각자 처한 위험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 산하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의 도시안전 관련활동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인증사업인 안전도시(Safe Communities)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안전에 관한 세계 동향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UNISDR의 도시안전을 위한 활동들

UNISDR은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UN기구이다.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의 조정, 효과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의 집행 가이드 및 진척상황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추진, 기후변화 적응을 비롯한 재해경감을 위한 투자와 교육, 참여 촉진, 재해경감을 위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ISDR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 글에서는 UNISDR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도시차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효과행동강령(HFA) 계획과 재

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aking Cities Resilient, MCR) 캠페인사업을 살
펴보기로 한다.

표1 UNISDR의 주요 프로그램

	주요 사업 구분	주요 내용
	효고행동강령 (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 추진	HFA의 집행을 가이드하고 진척상황 모니터링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Global Platform 구축	재해경감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격년 단위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포럼
	조정	Regional Platforms 구축
		각종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포럼으로서 지역단위(아시아태평 양,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에서 운영
		National Platforms 구축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해경감노력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단위에서 운영되는 포럼
	효고행동강령 이후 준비 (Post-2015 Framework)	효고행동강령 이후의 새로운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작업
캠페인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Making Cities Resilient, MCR)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2014년 9월말 현재 세계 2,182개 도시 참여)
	안전한 학교 및 병원 만들기	안전한 학교와 병원을 만들기 위한 "One Million Safe Schools & Hospitals" 캠페인
	국제 재해경감의 날 (International Day for Disaster Reduction) 개최	재해경감노력을 축하하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주제가 달라짐(10월 13일)
	재해경감에 대한 사사카와상 (UN Sasakawa Award) 시상	재해위험경감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수여
	장려	기후변화적응, 방재교육, 방재분야에 서의 성취평등 해소, 지속가능발전, 방재분야 활동가 등
정보제공	전 세계 자연재해에 대해 격년단위 로 평가보고서(Global Assessment Report) 발간, 재해경감 지식관리를 위한 포털 'PreventionWeb (www. preventionweb.net)' 운영, 재해관련 용어 정의 및 표준화, 재해관련 통계정보 제공, 간행물 발간 등	

자료 : UNISDR 홈페이지(<http://www.unisd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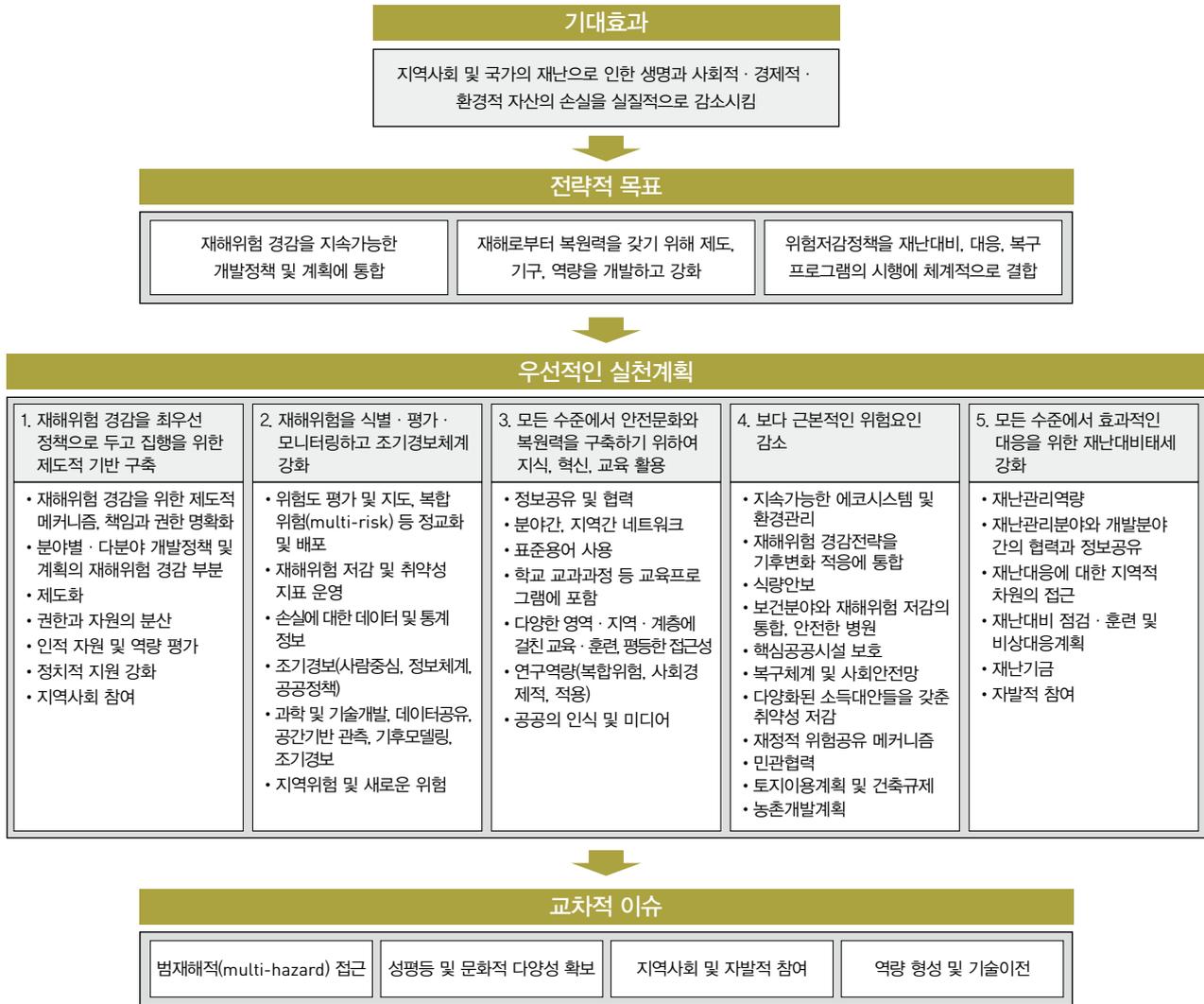
가. 효고행동강령(HFA)

HFA는 재해에 강한 국가와 지역사회를 만
들기 위해 세계 168개 정부가 참여하여 작성한
2005~20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10개년 계
획으로서, 국제사회의 재해경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UNISDR
은 HFA의 집행을 가이드하고 진척상황을 정기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2015년 효고행동강령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적인 계획(Post-2015 Framework)을 개
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HFA는 전략적 목표로서 모든 수준에서 재
해위험 경감을 개발정책과 계획에 통합시키
고, 재해로부터 복원력(resilience)을 갖도록
제도, 기구, 역량을 개발·강화하며, 위험저감
정책을 재난대비·대응·복구 프로그램들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적인 실행수단으로서
1) 재해위험 경감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집
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재해위험을 식
별·평가·모니터링하고 조기경보체계 강화
3) 모든 수준에서 안전문화와 복원력을 구축
하기 위하여 지식, 혁신, 교육을 활용 4) 보다
근본적인 위험요인 감소 5) 모든 수준에서 효
과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태세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
차적인(cross-cutting) 이슈로서 범재해적
(multi-hazard) 접근, 성평등 및 문화적 다양
성 고려, 지역사회 및 자발적 참여 강화, 재난
대응 역량 형성 및 관련 기술의 이전 등을 강조
하고 있다.

그림1 효고행동강령(HFA)의 목표 및 우선적인 실천계획



나.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CR) 캠페인

MCR은 2010년 이래 UNISDR 주도로 도시차원의 위험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캠페인 사업으로서, 도시안전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 도시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9월 말 현재 세계 2,182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2013년 4월에 가입하였다.

MCR에 가입하면 기후변화 적응 및 재해경감에 관한 노하우 자문과 기법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편, 10가지 필수사항(10 Essentials)을 이행하도록 권고받게 된다. 10가지 필수사항에는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조직·제

도·예산, 시민참여, 데이터 확보,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 도시개발에서의 재해위험 고려, 도시 기반시설 정비, 교육·훈련, 예·경보체계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UNISDR은 재해대응능력과 수준으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가평가도구(Local Government Self-Assessment Tool, LG-SAT)를 제공하고 있다.

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CR)'의 10가지 필수 이행 사항

1.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초하여, 재해위험을 인식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조직 및 조정기능을 정립
2.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고 소유자, 저소득가구, 지역사회, 기업 등으로 하여금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투자를 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3. 재해 발생원과 취약성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고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개발 계획 및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공론화
4. 배수시설과 같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관리를 하고 기후변화에 대처
5. 모든 학교와 보건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6. 위험을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규제와 토지이용계획 원칙을 적용하고, 저소득주민을 안전한 지역에 배치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개선
7. 재해저감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시
8.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해 생태계와 자연적인 버퍼지역을 보호하고, 위험저감대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
9. 조기경보시스템 및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례적으로 대비훈련 실시
10. 재난발생 후 재건에 있어 피해주민의 니즈(needs)를 중심으로 지원

자료 : UNISDR 홈페이지(<http://www.unisdr.org>)

10가지 필수사항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재해 위험경감요소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관련 계획과 활동들에 포함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많은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재해저감을 위한 계획에서는 가용한 자원(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기술적 자원, 자연자원)을 탐색하고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표2 재해저감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주요 활동

단계	단계	활동 내용
1단계	10가지 필수 이행 사항 (10 Essentials) 적용을 위한 구성 및 준비	1. 제도 정비 및 인식 제고 2. 활동가를 동원하고 참여절차 공식화 3. 계획 및 절차 이행
2단계	도시의 리스크 진단 및 평가	4. 도시의 리스크 숙지 5. 리스크 평가 실시 6.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주체 분석 7. 평가보고서 준비
3단계	안전하고 복원력 강한 도시를 위한 행동계획 개발	8. 비전, 목표, 주요 행동 정의 9. 프로그램 및 사업 정의 10. 재해위험경감계획 제도화 및 유지
4단계	계획 집행	11. 집행 및 자원동원 12. 광범위한 참여 및 책임감 제고
5단계	모니터링 및 진도관리	13. 계획의 모니터링, 진도관리, 평가 14. 계획의 홍보, 전파, 촉진

자료 : UNISDR 홈페이지(<http://www.unisdr.org>)

3. WHO의 안전도시사업(Safe Communities)

WHO의 안전도시사업은 1970년대에 스웨덴에서 기원하여 1989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국제적인 인증사업으로, 도시,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증진과 손상·폭력·자살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WHO가 정의하는 안전도시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등)와 행위변화(개인 및 그룹, 조직 등)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손상(injury)과 불안감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고 건강한 삶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도시, 도시지역 등을 말한다. 즉, WHO의 안전도시사업은 다양한 인위적·자연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인간의 손상(injury)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특징이 있다.

2014년 6월 초 현재 전 세계 336개 도시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0개 도시 또는 지역사회가 인증을 받았는데, 2002년 경기도 수원이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광역시로는 부산시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 내에서는 송파구와 강북구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의 많은 도시들이 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WHO의 안전도시로 인증받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요건을 이

행해야 한다. 대체로 다양한 집단·계층 간의 위험의 공평한 배분과 취약집단에 대한 배려, 파트너십과 협업, 정기적 위험 및 손상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WHO의 '안전도시(Safe Communities)' 인증을 받기 위한 7가지 이행요건

1. 안전과 관련되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파트너십과 협업
 2. 성, 연령, 환경, 지역여건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가능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3. 고위험군 집단 및 환경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취약집단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4. 가용한 증거에 기반한 프로그램
 5. 손상(injury)의 빈도와 원인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
 6. 프로그램, 과정,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운영
 7. 국가적·국제적 안전도시 네트워크에의 지속적인 참여
- 자료 : Karolinska Institutet 홈페이지(<http://www.ki.se>)

WHO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들은 대체로 민간주도로 안전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97년 WHO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안전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는 캐나다 브람프톤(Brampton)시는 '브람프톤 안전도시 파트너십(Brampton Safe City Partnership)'이라는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조직이 주도하고 있다. 이 조직은 안전도시 인프라로서 수많은 민간 또는 민관 협업조직과 기구들을 통해 성과 연령,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린이 손상예방, 화재예방, 청소년 폭력예방, 노인안전, 사업장 안전, 교통안전, 비상대비, 범죄예방 등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위험군과 취약집단의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동성애자 등

다양한 집단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손상의 발생빈도 및 원인에 대한 기록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2 브람프톤시(캐나다 Ontario주)의 안전도시 프로그램 주요 분야



4. 국제기구들의 도시안전을 위한 활동들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이상에서 UNISDR의 재난을 중심으로 한 도시안전을 위한 활동들과 WHO의 손상을 중심으로 한 안전도시 인증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안전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력과 참여는 공공부문에서의 부처간·분야간 협력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인접한 도시나 국제적인 협력까지 포함한다.

둘째, 도시안전에 대한 정보통합과 공유,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도시안전을 위한 핵심 중의 하나는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안전취약계층 및 집단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또는 집단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위험정보의 조기알림시스템 등 재난대비 및 대응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재난과 사고위험을 현실적으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구조·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방재시설을 비롯하여 도시기반시설, 시가지 토지이용 및 건축 등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점증하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시설능력을 높임은 물론, 도시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인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하고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서울의 도시안전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시는 지난 세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수요와 도시공간수요를 감당하기에 급급하였고 그에 따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취약공간과 취약집단이 도시 곳곳에 양산되었다. 이러한 취약지역과 취약집단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난과 사고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도시안전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어가고 있고 안전의 대상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선 시장체제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기구들의 안전도시 활동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가 도시안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안전을 최상위 정책 목표로 격상

도시안전을 최우선 정책목표 중 하나로 두고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점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 도시공간의 고밀화·노후화에 따른 취약성 증가, 취약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한 잇따른 국내의 대형재난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물론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안전을 강조하고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관심이 높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충분히 선연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실질적으로

도시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은 곧 복지' 인식, 취약계층과 집단의 배려 강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에 맞는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도시기능 마비와 같은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 중에서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하며, '안전은 곧 복지'라는 인식 하에 위협의 공평한 배분과 취약계층과 집단에 대한 배려가 특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서울에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위협요인은 범죄와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2013년 현재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절도) 발생건수는 132,966건에 달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수는 57,139건에 달한다.

셋째, 도시안전을 위한 부처간, 기관간 협력 및 조정 강화

도시안전을 위한 부처간·기관간 협력·조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도시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과 자원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4년 도시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의 통합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부서간 장벽의 극복과 협력, 계획의 성격 등의 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진일보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계획의 현실화를 기대해 볼만하다.

넷째, 민간의 참여와 역할 강화

도시안전을 위하여 시민, 시민단체, 기업 등 민간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도시안전의 많은 부분들이 시설물 분야이고 막대한 투자비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의 몫이기는 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재난과 사고들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장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범죄,

사고, 재난 등에 대한 주민중심 또는 민관협력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시안전 및 위험도 지속적, 정례적으로 평가

도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가공·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안전 및 위험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정보의 정책수립의 활용과 시민들에 대한 제공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전파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시스템과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되,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소셜미디어(social media) 등을 십분 활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형복합재난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 대비

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는 물론 대형복합재난이나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복합재난은 여러 종류의 위험요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은 인구와 시설이 상호의존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인위적인 물리적·사회적 기반체계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연쇄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로 비화될 수 있다. 현재의 대비·대응체계는 현재의 부처·기관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와 여러 부처·기관·주체들의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하는 대형복합 재난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도시계획 단계부터 안전 적극 고려

도시안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방재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도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기성시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방향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에서 안전 및 방재의 측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단기적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한 측면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

늘날 그에 대한 공적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제도 내의 방재·안전분야를 대폭 보강하고 있는데, 서울수도 서울시의 특성에 알맞는 안전도시 조성 모델과 수법,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도시안전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장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편익이 지속적으로 돌아오는 공공재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안전 확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생활안전 관점에서 본 서울의 도시 환경특성 연구
- 서울특별시, 201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 UNISDR 홈페이지(<http://www.unisdr.org>)
- Karolinska Institute 홈페이지(<http://www.ki.se>)